

수입 양계산물 원산지 표시



김 기 윤 축산경제신문사 대표

수년간 국내 업체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수입양계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 양계 축산인과 국내산 취급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가 보다.

2003년(작년)에 수입된 닭고기가 89,000톤에 9,500만\$인데 이중 절반이상이 가공업체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최종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알고 사 먹고 있는 실정.

달같은 채산성이 맞지 않고 유통이 어려워 가공원료로 일부가 수입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닭고기는 수입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

지난 6월초 한나라당의 이인기 의원이 모든 음식점에서 수입식육원산지 표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을 안을 발의했는데 그 대상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포함 시켜줄 것을 축산단체들이 간곡히 요청한 걸로 안다.

또한, 축산관련 단체 협의회는 음식점내 모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실시를 정

“

책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열린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에 건의하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음식점내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내 양계산업의 보호와 국민건강 및 식생활 증진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화급한 실정이다.

최근 축산연구소에서 수입닭고기와 국내산을 육안 판별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는 극히 힘든 실정이다.

지난해 농림부 합동 점검반이 수입닭고기 유통경로 파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자 등을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도입, 강력한 단속을 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양계업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외국축산물을 마구 수입해 부정유통 시키는 기업에 대한 거국적인 불매운동 또한 벌려야 할 것이다.

결론은 정부에서 소비자들의 신선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하고 국내 양계 산업보호를 위해 법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벌려 엄벌에 처함은 물론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부정 유통업자 업체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하여 근절 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의 양계산업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종계쿼터제 이행과 전세계적으로 사육환경이 열악한, 시설 근대화를 이루어 평균온상에서 탈피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에게 더 질 좋은 닭고기와 계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근대화와 일본처럼 농협에서 40%이상 시장개입을 하여 수급조절을 책임져 준다면 양계산물의 가격안정과 업체보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헛살이 조금은 비추는 양계업계의 보다 나은 내일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양계**

”